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

An Outlook for Social Changes in an Aged Korea: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Case

이윤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1]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의미 있는 시점이다. 인구고령화는 사회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특성이다. 전 세계적으로 2060년까지의 인구고령화를 예측한 결과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유럽 국가들과 함께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는 일본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면서도 그 속도는 더 빨라 2045년 이후에는 고령화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사회 전 영역에서 고령화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규모 확대와 후기고령자 증가로 사회보장비가 늘어나고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대응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일본의 경험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가 겪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1. 들어가며

인구고령화는 사회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는 산업화된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인구 특성으로, 이들 국가에서 인구고령화는 이미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서서히 나타나 안정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화율 7% 이상)를 거

1)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는 2017년 고령화율이 14.0%로 제시되며,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18년 고령화율이 14.2%로 발표됨. 이 글에서는 본문에서 활용되는 자료와의 통일성을 위해 '장래인구추계(2016)' 자료를 활용함. 따라서 고령사회의 진입을 2018년으로 보고자 함.

쳐 2018년에는 고령사회(고령화율 14% 이상),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율은 급속하게 상승해 2060년에는 세계 최고 고령화 국가인 일본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는 단순히 고령자의 삶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사회보장을 비롯한 사회 전 영역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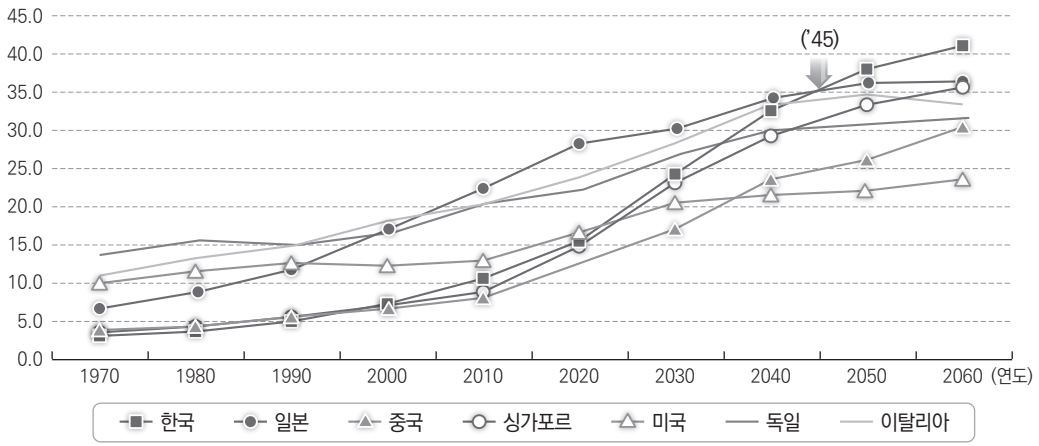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8년을 앞두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고령화 현상을 다시금 진단하며, 이미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민해야 할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인구고령화 현상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는 '급격한 고령화'이다. 고령화 수준에 따른 사회 구분에 의하면 고령화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또는 21%를 넘는 경우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고령화율이 7.2%로 나타나 고령화사회가 도래하였으며, 18년 만에 고령화율 14.3%로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국가통계포털, 2016). 2017년 현재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으며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

그림 1. 국가별 고령화율 변화 추이 및 미래 예측(1970~2060년)

(단위: %)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7b). 국제기관통계(노령화지수). http://kosis.kr에서 2017. 11. 10. 인출.

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5년이 걸렸으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를 넘는 데 소요된 시간은 10년이었다.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의 최단 기간, 최대 속도의 고령화라는 기록을 다시 쓰게 되었다. 통계청 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65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42.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이미 세계적인 인구구조 특성으로 자리잡았다. 일찍이 산업화와 가구 구조 변화가 발생한 유럽 중심의 서구에서는 1970년대에 고령화가 시작되었다. 독일은 고령화율이 1970년에 13.6%, 2000년에는 16.5%였으며, 2010년에는 20.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탈리아에서도 독일과 유사한 형태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난다. 과거 독일은 고령화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고령화율 증가 속도는 최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우리나라, 일본 등의 국가에 비해 빠르지 않아 2060년 고령화율은 우리나라보다 약 10% 포인트 낮은 31.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율의 변화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높은 국가인 일본은 1970년에는 6.9%였으나 2000년 17.9%, 2010년에는 22.5%로 증가해 4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세계 1위 고령화율은 향후 30년간은 유지되지만 204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고령화율을 앞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의 특성은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와 중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세계적인 고령화의 특성은 2000년대 이전에는 유럽 국가가 중심이 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면 이후에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중국의

표 1. 국가별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및 미래 예측(1970~2060년)

국가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한국	4.65	2.92	1.57	1.50	1.17	1.32	1.46	1.57	1.63	1.69
중국	6.25	3.00	2.73	1.51	1.58	1.63	1.69	1.72	1.75	1.77
일본	2.04	1.83	1.65	1.37	1.34	1.48	1.58	1.65	1.70	1.73
싱가포르	3.65	1.84	1.70	1.57	1.26	1.26	1.30	1.34	1.37	1.39
미국	2.54	1.77	1.91	2.00	2.05	1.89	1.90	1.91	1.91	1.92
독일	2.36	1.51	1.43	1.35	1.36	1.47	1.54	1.59	1.63	1.66
이탈리아	2.50	1.89	1.35	1.22	1.42	1.49	1.58	1.65	1.69	1.73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7c). 국제기관통계(합계출산율). http://kosis.kr에서 2017. 11. 10. 인출.

아시아 국가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낮은 출산율과 수명 증가로 설명된다. 사망자 수에 비해 출생자 수가 적어지면서 전체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고령화를 경험하는 국가들에서는 합계출산율 2.0 이하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고령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국가에서는 이 수치가 더욱 낮다. 일본은 1970년에 합계출산율 2.04명에서 2010년 1.34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한국은 1970년 4.65명에서 1990년 1.57명까지 감소한 뒤 2010년 1.17명으로 세계 최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급격한 고령화가 예상되는 싱가포르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대표적인 고령 국가였던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는 것은 출산율은 감소하였으나 그 속도가 급격하지 않았고, 2000년에 합계출산율이 1.22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70년 58.8세였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79.5세로 약 20.7세가 증가하였다. 2060년에는 기대수명이 88.5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은 1970년에 71.4세였던 기대수명이 2010년 82.7세로 10년 정도 증가하였으며, 2060년에는 89.2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 한국은 일본에 비해 기대수명이 12.6세가 짧았으나 2010년 3.2세로 그 간격이 좁아지고 2060년에는 거의 비슷해졌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 향상, 의료 발달 등으로 한국의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고령화율이 높은 국가에서도 대부분 기대수명이 꾸준히 증가하여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인다. 2010년에는 대

표 2. 국가별 기대수명 추이 및 미래 예측(1970~2060년)

(단위: 세)

국가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한국	58.8	65.0	70.3	74.9	79.5	82.4	84.2	85.7	87.1	88.5
중국	55.5	65.5	68.9	70.9	74.7	76.5	78.1	79.6	81.1	82.5
일본	71.4	75.4	78.5	80.5	82.7	84.0	85.3	86.6	87.9	89.2
싱가포르	67.2	71.0	74.9	77.7	81.2	83.3	84.8	86.2	87.5	88.8
미국	70.4	73.3	74.9	76.5	78.2	79.6	81.1	82.6	84.1	85.3
독일	70.7	72.3	75.0	77.3	79.7	81.3	82.9	84.4	85.7	86.9
이탈리아	70.9	73.5	76.4	78.8	81.5	83.3	84.7	86.0	87.2	88.4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7a). 국제기관통계(기대수명). http://kosis.kr에서 2017. 11. 10. 인출.

부분의 국가에서 기대수명이 80세 전후였으며 2060년에는 88세 수준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경험하는 인구 특성은 30% 이상의 높은 고령화율, 합계출산율 2명 미만의 저출산 현상, 90세에 가까운 높은 기대수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 또한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일본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와 대응 양상

인구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삼식, 강혜규, 김정선, 여유진, 신윤정, 강은나 등(2015)에 의하면 인구고령화는 노동력의 수급 불균형과 고령화, 내수시장 위축과 잠재성장률 둔화, 산업구조 변화, 금융시장의 장수 리스크 우려, 주택 수요 감소 및 수요 변화 등의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행(2017) 또한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 소비, 경상수지, 재정,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인구고령화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구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령자는 사회적 주류로서 사회정책의 주요 대상자로 부각되고,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책이 확대될 것이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건강과 기능 저하로 인한 의료적 욕구와 돌봄(care) 필요성 증가, 근로 소득 감소로 인한 노후소득 필요 증가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해 의료비 지출 증가와 노후소득보장 확대 등 사회보장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미 이 같은 현상을 겪고 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고령화 특성이 유사한 일본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초래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많은 사회 변화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축률과 투자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세계은행(2016)에 따르면 일본은 저축률이 1980년 31.0%에서 2013년 21.8%로 감소하며 투자율 또한 32.1%에서 21.1%로 감소했다.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 공가율 증가(2008년 13.1%), 대도시 한계통근지역(도쿄 30㎞ 이상 지역)의 지가 급락, 신도시 주택시장 쇠락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조주현, 2012).

일본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는 고령자 장기요양(개호) 인력 부족 현상으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일본 개호노동안정센터의 개호노동실태조사(2014)에 의하면 개호근로자 부족률은 전체 사업소의 59.3%로 높게 나타난다(김명중, 2015에서 재인용). 이를 해소하고자 2016년 발표된 '일억총활약플랜'에서는 개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사회보장 비용 중 연금, 고령자 의료,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 비용은 전체 사회보장 비용의 68.1%(일본 내각부, 2016)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일본은 매년 "고령사회백서" 발간을 통해 고령자의 상태와 대응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다. 최근 고령사회백서(2016)에 나타난 일본 고령자의 삶의 모습 중 우리나라 현 고령 세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노후 경제 상태의 안정성이다. 일본 고령자의 64.6%는 경제 상태에 대한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일본 내각부, 2016).

고령화가 심화된 일본의 고령자 특성 중 눈여겨볼 부분은 높은 기대수명으로 인한 후기고령자 증가, 사회적 보호 노인의 증가이다. 일본은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가 계속적으로 늘어 고령사회 시작이었던 1995년 12.6%에서 2015년 18.0%로 증가하였다. 최근 일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는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른 고독사 증가이다. 일본의 60세 이상 고령자 중 17.3%는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일본 내각부, 2016). 또한 후기고령자는 치매 등으로 인해 보호 필요자 규모를 계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노인이 15.5%(2015년)에서 20.0%(2025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요양 필요 노인 또한 370만 4000명(2003년)에서 591만 8000명(2014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고령사회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 시기는 고령화율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때였다. 기본법을 근거로 1996년 1차 고령사회대책대강을 수립하고 2001년 2차 대강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3차 대강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2] 일본의 고령사회대책대강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보다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의 삶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령사회대책대강의 기본 이념과 분야는 아래 표와 같이 노인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 노후소득, 건강, 사회참여, 생활환경 등에서의 초고령사회 대응과 더불어 현 청년기의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초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 등으로 제시된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억총활약 국민회의'에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2015. 11.) 일억총활약 플랜을 제시하였다. 고령화 부분 플랜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개호서비스) 공급 확보를 위한 기관 정비 및 인력 확보 종합대책, 둘째, 개호서비스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가족 근로 형태 다양화 등의 지원(work-life balance), 셋째,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건의료체계 개혁, 고령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다양한 근로 기회 제공, 연금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에서는 개혁추진법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속 가

2) 일본의 '고령사회대책대강'은 정부의 고령사회 대책의 중장기적인 지침 성격이며, 경제·사회 정세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대체로 5년을 목표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재검토하도록 함.

표 3. 일본 고령사회대책대강의 기본 이념과 시책 분야

기본 이념	시책 분야
① 고령자에 대한 접근법 관련 의식 개혁: 노인을 의존적인 사람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관점으로 의식을 개혁함. ② 노후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 ③ 고령자의 의욕과 능력을 활용함. ④ 지역 연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를 실현함. ⑤ 안전·안심인 생활환경을 실현함. ⑥ 청년기의 '인생 90년 시대'에 대비하고 세대 순환을 실현함.	· 취업·연금 등 분야 · 건강·개호·의료 등 분야 · 사회참여·학습 등 분야 · 생활환경 등 분야 · 고령사회에 대응한 시장의 활성화와 조사 연구 추진 ·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초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

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개혁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저출산 대책, 의료 및 개호, 연금 등 각 분야의 검토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였다.

2015년 발표된 일본의 일억총활약 플랜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에서 제시된 정책의 방향에서 초고령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엿볼 수 있다. 총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경제 영역에서의 변화가 초래된다. 특히 고령자를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정책 영역인 고령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노후소득보장 영역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만 비용을 부담할 인구는 감소함에 따라 지속가능성 여부가 매우 큰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을 알 수 있다.

4.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변화 예측과 향후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인구 시계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로 진입하면서 급격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진행과 함께 여러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201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총량적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동력의 평균 연령이 2015년 40.3세에서 2030년에는 42.9세로 증가할 것이며, 잠재성장률은 2001~2010년 4.42%에서 2051~2060년 0.99%로 하락될 것으로 보인다(대한민국정부, 2016). 또한 사회보장 납부 인구는 감소하나 수급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 지출 부담이 급증하여 국민연금은 2044년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3년 적립금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 2017). 또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후기고령자 규모가 커지고 치매로 고통받는 고령

자가 2015년 65세 이상의 9.79%에서 2060년 16.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치매센터, 2017). 이는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규모를 확대시켜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 심화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는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험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현 고령자의 특성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본 고령자의 독거율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독거 비율은 이미 일본보다 높다는 것이다.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독거노인은 23.0%이며(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이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18.0%와 비교해도 높은 비율이다. 노인이 혼자 거주하는 것은 일본의 사례에서 본 바과 같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독거사'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가족 등에 의한 보호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의 고령자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것에 비해 2016년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의 46.5%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높은 빈곤율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회보장의 부담으로 인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령자의 특성은 일본과 비교할 때 앞으로 고령사회에서 극복해야 할 위기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특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대응 영역은 2020년까지 '고령사회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목표로 1차(2006~2010년)와 2차(2011~2015년) 계획을 수행하였으며, 3차(2016~2020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3차 기본계획은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목표로 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고령 친화 경제로의 도약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 영역 내용은 일본의 고령사회대책대강과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 이 구성은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 변화에 초점을 둔 적절한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현 기본계획이 저출산 대책과 함께 논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을 해소함으로써 인구 총량을 증가시키고 사회 고령화를 지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서도 합계출산율은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고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준다. 즉, 저출산을 통한 전체 인구 규모 증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이미 다가온 고령사회와 가까운 시일 내에 올 초고령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현시점에서는 본격적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안)' 수립을 저출산

계획과 별도로 준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 전 영역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5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고령자인 75세 이상으로 진입하고 고령화율이 20%를 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고령사회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준비에 주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7. 3. 7.). **제4차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16~'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보도자료. http://www.mosf.go.kr에서 2017. 11. 11. 인출.

김명중. (2015). **일본의 개호근로자 현황과 개호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대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9월호, 62-77. 노동연구원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삼식, 강혜규, 김정선, 여유진, 신윤정, 강은나 등. (2015).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내각부. (2006). **고령사회대책**. http://www.cao.go.jp/kourei에서 2017. 11. 11. 인출.

일본 내각부. (2016). **고령사회백서**. http://www.cao.go.jp/kourei에서 2017. 11. 11. 인출.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주현. (2012). **일본의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주택시장의 대응동향**. 국토, 2012년 4월호(통권 366호), 56-63. 국토연구원.

중앙치매센터. (2017). 치매현황. http://www.nid.or.kr에서 2017. 11. 11. 인출.

국가통계포털. (2016).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17. 11. 10. 인출.

국가통계포털. (2017a). 국제기관통계(기대수명). http://kosis.kr에서 2017. 11. 10. 인출.

국가통계포털. (2017b). 국제기관통계(노령화지수). http://kosis.kr에서 2017. 11. 10. 인출.

국가통계포털. (2017c). 국제기관통계(합계출산율). http://kosis.kr에서 2017. 11. 10. 인출.

한국은행. (2017).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World Bank. (2016). *"Live Long and Prosper:Aging in East Asia and Pacific."* Overview booklet. World Bank, Washington, DC.